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문의 : 이재근 상황실장 (010-9727-4035),  
미류 상황실장 (010-3667-2256)  
제 목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날 짜 2014. 7. 02. (총 8쪽)

## 보 도 자 료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일시 · 장소 : 7/2(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7월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함을 선언하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닦을 특별법을 국민의 힘으로 제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국을 순회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세월호 가족버스', 각계 각층이 동참하는 '416 행동 416명의 기적', 7/19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집중 범국민행동, 7/24 세월호 참사 100일에 즈음한 국민행동 등 다양한 계획을 통해 7월 중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3. 기자회견 이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국회로 이동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받는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끝.

-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 ▣ 별첨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 대표자 회의 결의문(기자회견문)
- ▣ 별첨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7월 활동계획
- ▣ 별첨 4. 성실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7/2(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 여는 말씀
- 참석 대표자 발언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7월 활동 계획 발표
- 전국 대표자 회의 결의문(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2.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 대표자 회의 결의문(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 대표자 회의 결의문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여객선 침몰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타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충격이었다. 해경이, 국정원이,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알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통로가 곳곳에서 막혀있으며 언론에 의해 명백한 오보가 확산되기도 하는 현실의 확인이었다.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이기에는 막을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회였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안도했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를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깨달은 미안함이었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사 초기 구조와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실종자를 목 놓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가 죽어간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있다. 살아 돌아왔지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이 있다. 참사의 고통에 전염되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해 이웃을 돕는 동료 시민들이 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참사를 낳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만이 참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참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들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골든타임에 뒤흔느냐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보호했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들의 무책임만 범정에 세웠다. 유병언만 잡으면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인 양 군대까지 동원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국무총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나 대통령은 그를 다시 국무총리로 불러 세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책임을 거부하는 의지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더니 국회가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 제출은 모두 거부했다. 참사의 진실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기록들이 군데군데

잘려나갔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대통령을 탈출시키기 위해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은 거둘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려는 듯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번번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김기춘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데에도 시간을 끌었다. 가족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관보고 일정과 장소를 제멋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종자를 끝까지 수색하겠다더니 벌써부터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가 범정부대책본부에서 나오고 있다.

책임을 거부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유야무야시키면서 박근혜 정부는 고집스럽게 위협을 확산시키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개조를 부르짖더니 김기춘 실장과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안전을 해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위협 1순위로 핵발전소를 끄는데도 대국민 담화 직후 핵발전 수출을 위해 출국했고,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공공기관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KTX와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도 재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의료민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방향을 틀어서 국민의 뜻에 화합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탐욕을 규제하여 국민에게 드리운 위협을 걷어내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거부는 단순히 부도덕함이나 무책임함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부인하겠다는 의지이며 위협이 확산되더라도 탐욕을 지탱해야겠다는 의지다. 이와 같은 의지는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며 물대포를 쏘아대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의지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것을 시작할 힘은 국민들에게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분노했던 국민들이 4.16 특별법을 만들 것이다. 4.16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사고과정, 사고가 참사가 된 근본적 원인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4.16 특별법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어야 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고 법적 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자에게는 행정적 책임을, 정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자에게는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4.16 특별법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들어간 특별법이어야 한다. 계속되는 사고와 참사의 고리를 끊고 국민들이 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중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7월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 가족버스가 더욱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을 것이다.
- ✓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416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 ✓ 7월 19일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집중 범국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 ✓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100시간 행동을 조직하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국가는 달라야 함을 선언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닦을 4.16 특별법을 제정하자.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 대표자 회의**

■ 별첨 3.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7월 활동 계획

1. 사업 목표

- 7월 30일 재보선 전까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구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
-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행동, 세월호 가족들의 공동행동 강화

2. 사업 계획

1)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 세월호 가족버스

- 7월 2일 경부터 12일(서울)까지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
- 동쪽과 서쪽을 2개 팀으로 나누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 순회
- 순회를 통해 천만 특별법 서명을 호소,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냄

2) 특별법 안 마련

- 7월 2일 특별법 안 토론회 개최 (대한 변협 주최)
- 국회의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서명 받기 시작 (국회의원 151명 목표)
- 7월 7일 경 특별법 국회 청원 (참사 100일 되는 7월 24일까지 제정 촉구)

3) 7월 5일 촛불 / 7월 12일 촛불

- 7월 5일 촛불, 안산 집결
- 가족들의 전국 순회버스가 서울에 들어오는 오는 7월 12일 촛불 진행

4) 7월 19일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세월호 버스 집결

- 7월 19일 세월호 버스를 통해 전국 집중 대회 개최, 세월호 버스 수백 대 서울 집결
- 7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 전개 / 서울 도심 (국회 변동 가능)
- 특별법 제정을 위한 416 행동 (416 약속 지킴이 구성하여 7월 7일부터 진행. 7월 19일까지 매일 촛불 진행하면서 집중 홍보 목표)

5) 세월호 참사 100일 100시간 행동 (7월 21일 ~7월 24일)

- 세월호 참사 100일 국민행동 주간 선포
- 7월 21일 :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 (진상규명 대회)
- 7월 22일 : 위험사회를 멈추는 국민행동
- 7월 23일 : 전국 각지에서 팽목항으로 기다림의 버스.
- 7월 24일 : 세월호 참사 100일 행동

■ 별첨 4. 성실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  
책위원회 기자회견문 (7/2(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 성실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 달여 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상식을 국회가 인정하는 데에 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관보고 일정을 정하는 데에는 3주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관보고 일정과 장소는 결국 여당의 고집으로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줄거나 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방청하는 가족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고 한 달 전 국회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이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왜 해경을 비롯한 구조 인력들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가. 가슴에 구멍을 뚫었던 전원 구조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규제와 안전 점검이 어떻게 한결같이 완화되거나 무시되었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수확여행을 보내며 평범한 작별 인사를 했던 우리들이 잘못이었다 말인가.

밥을 먹다가도, 현관문을 열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마주해야 하는 아이의 빈자리에 물음표가 가득 차올라 다른 기억들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우리의 외침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달라는 절규입니다. 누구도 우리와 같은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침몰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도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의 물음표까지 버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호통을 치기 위해 왔습니다. 국회는 두 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 국정조사는 참사에 관련된 기관과 책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히는 준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빠른 질문과 빠른 대답으로 일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큰 책임감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16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 국정조사 특위의 몇몇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청와대 앞에서 무력한 국정조사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로 성역 없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

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국민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오늘 진도에서, 창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는 세월호 가족버스가 출발합니다. 천 개의 바람이 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천만인의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향해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겹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